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0
----------	-----

2019. 12. 2.(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1월 26일

-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및 점검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지원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위원장(행정부지사), 간사(담당부서장), 9명~15명 위원 성별 비율 고려,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시한 ‘적극행정 운영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임.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조례안 제2조는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대한 용어정의를 하였음.
 - 이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조례안 제3조는 적극행정 실행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이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계획 추진사항의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계획의 효율성 담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조례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이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내용
- 지난 10월 16일 정책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었던,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 세부 규정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를 수렴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위원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참고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1조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범위 안에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절차상으로도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20일)을 거친 바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10
----------	-----

제출연월일 : 2019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3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및 점검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지원위원회 구성 (안 제5조) : 위원장(행정부지사), 간사(담당부서장), 9명 ~ 15명 위원 성별 비율 고려,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충청북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북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지원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2.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3. 관련조문

- 안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11조(수당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외부위원 10명, 연2회 위원회 개최

나. 추계 결과 : 연 2,540천원

- (기본수당) $100,000\text{원} \times 10\text{명} \times 2\text{회} = 2,000,000\text{원}$

- (원거리수당) $(30,000\text{원} \times 4\text{명} \times 2\text{회}) + (50,000\text{원} \times 3\text{명} \times 2\text{회}) = 540,000\text{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위원회 pool 수당 활용 예정)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출		2,540	2,540	2,540	2,540	2,540	12,700
위원회 수당 등		2,540	2,540	2,540	2,540	2,540	12,700
재원 조달		2,540	2,540	2,540	2,540	2,540	12,7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40	2,540	2,540	2,540	2,540	12,700
	지방세	2,540	2,540	2,540	2,540	2,540	12,700
	세외수입						